

# 물관리대책 너무 소홀하다

**전**국이 겨울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과연 정부2청사 세면장에서는 물을 낭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등 물하곤 다소 거리가 있는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절수운동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농림수산부 건설 교통부가 있는 청사의 세면장도 예외는 아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컵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고 있다. 세면대에 60~70%의 물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자신들은 물을 틀어 놓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기도 한다.

「양치질할 때 컵을 이용하면 수도꼭지를 열어 놓은 것보다 5ℓ의 물이 절약된다」 「한방울의 물도 아끼자」는 등 세면장에 붙어있는 절수홍보 스티커에 신경을 쓰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환경부가 2월 6일 수세식화장실 물통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고 양치질할 때는 컵을 이용하며 식기류 등에 묻은 기름기는 휴지로 깨끗이 닦은 뒤 세척하는 등의 절수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음에도 습관적인 물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가 같은 달 13일 급수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범국민절수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일

주일에 3시간 정도 단수를 권장하는 등의 절수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한 뒤에도 이러한 구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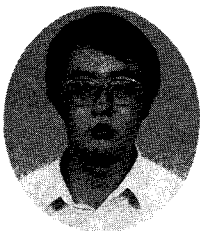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김영삼 정부의 물관리기능과 대책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제한급수지역은 14개 시군 74만 5천 1백 58명이며 이중 경남 남해군 미조면은 5일에 3시간, 인근 삼동면 지족리와 남면 홍덕리는 3일에 2시간만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다.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경우 제한급수지역과 주민이 3월말 22개 시군 79만 7천명, 5월말 30개 시군 85만 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댐저수율도 이날 현재 안동댐 22.0%, 임하댐 23.9%, 합천댐 23.4%, 섬진강댐 6.7%, 영천댐 1.1% 등 예년평균저수율 50.4%를 훨씬 밑돌고 저수량이 비교적 많은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의 저수율도 36.5~48.2%로 이들 3개 댐의 예년 평균저수율 55.1%보다 적다.

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있는 미태평양함대사령부 기상예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가뭄 조건」이란 기상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뭄피해가 환경부



**엄성덕**  
(국민일보 정치부기자)

등 물관련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기상예보센터는 『태평양지역에서 엘니뇨현상이 재발함으로써 한국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심각한 가뭄이 올 겨울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예보센터는 『92년과 93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 엘니뇨현상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정상적인 기상조건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한국은 6월말까지 큰 비가 없으며 장마철에 태풍이 오면 해결될 수 있으나 장기간 비올 전망은 없기 때문에 장기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기상조건에 따라 가뭄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는데도 그동안 물관련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물관리업무중 상하수도 및 음용수관리업무는 지난해 5월 당시 건설부와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됐으나 건설부가 여전히 수자원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물관리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물관리 전문가들은 수질, 수량업무를 이원화해선 안되는데도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건설교통부로 나뉘어져 있어 유기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중 수질 수량업무가 이원화된 나라는 거의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상수도 보급율이 미국 서독 1백%, 영국 99.2%, 일본 94.9%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81.1%에 불과한 점도 식수난의 한 요인이 되고

전국 수도망 10만6백76km 중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이 5.6%인 5천6백28km에 달하는 등 수도관을 통해 새는 양이 엄청나다.  
전국 누수량 16억4천3백만을 평균 수도물생산원가인 t당 3백9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5천76억원에 달한다.

있다.

특히 경남 66.9%, 경북 58.4%, 전남 43.7%, 전북 61% 등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 이 지역의 식수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수도 보급율이 각각 40%와 60.2%인 충남·북 주민들의 식수난도 눈앞에 다가온 실정이다.

게다가 전국 수도망 10만6백76km 중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이 5.6%인 5천6백28km에 달하는 등 수도관을 통해 새는 양이 엄청난 점도 문제중의 하나.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수도물 생산량 52억 8천 6백만t중 31.1%인 16억 4천 3백만t이 노후수도관 등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었다. 이는 일본의 누수율 13%에 비해 2.4배, 미국의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전국에서 누수가 가장 심한 지역은 서울로 37.9%였으며 누수율이 30%를 넘는 지역은 부산(33.5%), 인천(33.2%), 광주(31.

8%), 대전(33.9%), 전남(35.9%) 등 6개 시·도였다.

누수율이 20%를 밑도는 지역은 18.7%인 경기도 한 곳일뿐 대구 26.1%, 강원 27.4%, 충북 23.4%, 충남 21.8%, 전북 23.2%, 경북 24.2%, 경남 25.1%, 제주 29% 등 대부분이 20%를 크게 넘었다.

전국 누수량 16억4천3백만t을 평균 수도물생산원가인 t당 3백9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5천76억원에 달한다. 이돈으로 하루 배출량 10만t 규모의 정수장 25개를 건설하면 연간 7백50만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 암반관정개발비가 평균 3천9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만3천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노후수도관교체를 등한히 했지만 연간 5천억원 이상을 그냥 버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암반관정개발의 경우 2월 18일 현재 계획수량 8백39공(3백27억원) 중 5백63공(2백억원)을 완료하고 나머지 2백76공(1백27억원)을 2월 말까지 끝내고 추가로 1천2백여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5백억원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지하수부존량 등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물문제해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한다. 물관련대책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시위와 항의가 빗발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